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제600호

지면안내 03 보도
2차 대의원총회 마무리됐다

04 사회
거리로 나선 노동자,
노동권 확보로 가는 행진

06 학술
한반도에 지진 안전지대란 없다

08 기획
생활동반자법, 한 지붕 아래 살면 '가족'이다

600년머,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한성대신문〉(이하 본지)이 지령 600호를 맞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성대신문사는 학내 구성원이 알아야 하는 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앞으로도 학내 구성원을 위한 대학언론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사회가 변모하는 오늘날은 대학언론에게 역사의 갈림길입니다. 500호를 발행했던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본지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기사를 5면에 게재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5면에 계속



축사

대학언론의 대표자로 우뚝 서기를



이창원 총장

〈한성대신문〉의 6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성대신문〉은 1976년 12월 15일 창간 이후 40여 년 동안 학생과 교수, 직원에게 소식을 전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600호 발간은 〈한성대신문〉이 한성대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는 의미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창간 당시 제호는 〈漢城女大學報〉로 국한훈용의 세로쓰기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漢城大學報〉, 〈한성대학보〉, 〈한성대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면서 가로쓰기 편집으로 전환하고,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지면 매체만이 아니라 홈페이지, 블로그 및 SNS 등 소통 채널을 다양화했습니다.

〈한성대신문〉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교내외의 이슈와 사안 그리고 사회, 문화, 학술 등의 정보를 깊이 있게 취재·분석해 기사로 제공하고, 독자의 기고나 칼럼 등을 담으며 대학언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의 참여와 관심이 큰 '한성문학상'과 '사진공모전' 등을 통해 교내 구성원의 문화, 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성대신문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한 수많은 학생기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성대신문〉이 언론으로서 교내외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정론직필(正論直筆)을 기대합니다. 어떠한 편향도 없이 사실에 근거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정보를 수집하며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독자의 증가를 위한 질적 성장 역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성대신문〉이 대학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대학언론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더욱 찬란하게 우리 사회를 비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기록이다



김남용 한성프레스센터장

격변 속에 있었고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신문의 역사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성대신문〉은 1976년 출발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남녀공학 종합대로의 승격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이후 숱한 위기와 기회 속에서 변모해 왔습니다. 우리 기자들과 학생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이 시간 동안 〈한성대신문〉은 한성대학교의 역사가 됐다고 감히 평가하고자 합니다.

기자가 갖춰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시대적 가치를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중요한 방향이자 과제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이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에 기초한 시대적 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잠든 자의 시간에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두를 향해 열려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성대신문〉이 1000호, 2000호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되길 기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한성대신문〉 600호 발간의 역사에 함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자들과 학생 모두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모든 학생기자들과 견고하게 이를 지켜낸 노력으로 만들어진 값진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편집국장으로부터 기념 축사를 의뢰 받았을 때 고사를 했습니다. 학교의 진정한 주체는 학생이니 학생대표가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사자의 다양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한성프레스센터장의 글이 의미 있을 것 같다는 편집국장의 요청으로 얼마 되지 않은 경험으로 무엇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사를 방문해 우연히 펼쳐봤던 신문에서 학창시절의 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기록 속 우리의 시대는 정치적

학생대표 간담회 진행, 학사 관련 안건 다수

‘제1회 한성대학교 타운홀 미팅(이하 타운홀 미팅)’이 지난 2일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타운홀 미팅은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의 새로운 명칭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사 및 비교과 부문, 생활 및 복지 부문 등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대학본부 관계자 17명과 학생대표 12명 등이 참석했다.

학사 및 비교과 부문 안건

- 기계전자공학부 분리 재요청
- 전공 과목 및 분반 증설 요구
- 문콘트랙 4학년 수업 추가 요청
- 인원수에 적합한 강의실 배정 촉구
- 강의 매매 예방책 도입 예고
- 녹화강의 재사용 문제 해소 예정
-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개선사항 제기

IT공과대학(이하 공대) 학생회는 ‘2023학년도 제2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에 이어 기계전자공학부를 기계공학부와 전자공학부로 분리해달라고 한 번 더 요구했다. 김기현(컴공 3) 공대 학생회장은 “기계 관련 트랙과 전자 관련 트랙은 별개의 형태로 존재했고 수업이나 행사, 행정 등 다방면에서 다른 학과로 취급해도 무방하다”며 “기계와 전자 관련 트랙 각각 분리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이해하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수업 관련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는 회계·재무경영트랙 내에서 회계나 재무 등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공과목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회계·재무경영트랙의 전공 수업은 경영이나 투자 등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김진형(사회과학 4) 사과대 학생회장은 “현재 회계·재무경영트랙의 교육과정으로는 회계나 재무 관련 전문지식 함양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다”고 전했다. 박용훈(학사지원팀) 팀장은 “전공 수업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전공선택 형태로 강의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비즈니스트랙과 기업경영트랙의 주·야간 합반 증설도 건의됐다. 학생수에 비해 개설 과목 수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박 팀장은 “글로벌비즈니스트랙 대부분의 강의가 3개 분반으로 운영 중이고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서면 신청을 받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며 “기업경영트랙의 경우 교·강사 인력이나 예산 부분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문수 총학생회장(좌), 이창원 총장(우)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은 문학문화콘텐츠트랙 4학년 수업 증설을 요청했다. 현재 문학문화콘텐츠트랙은 모집중지대 신입생 총원 및 강의 개설이 이뤄지지 않는다. 김형기(인문 4) 인문예술대 학생회장은 “2024년 1학기 기준 문학문화콘텐츠트랙 4학년은 전공필수 과목과 전공선택 과목 각각 1개씩만 개설돼 있다”며 “타 학년 강의 또한 수강신청이 어려워 졸업 인정 학점을 채우는 데 난항을 겪기에 4학년 수업 증설 및 타 학년 수업 서면신청 허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내년 문학문화콘텐츠학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전공과목이 개설된다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창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은 전공필수 과목 분반 증설 및 수업 인원수에 맞는 강의실 배정을 건의했다. 함현치(문문 2) 창의대 부학생회장은 “AI응용학과와 문학문화콘텐츠학과와 수강 희망 인원이 늘어났지만 분반 수는 작년과 동일해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이 많다”고 토론했다. 이어 “AI응용학과와 문학문화콘텐츠학과 수업 모두 강의실 정보보다 많은 학생이 수업을 수강해 학우들이 비좁게 수업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요를 분석해 수강인원이 많을 경우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실습실 관련 사안으로는 “컴퓨터 실습실을 탐구관 지하에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해당 트랙과 협의해 수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 학생회는 컴퓨터공학부 강좌 추가 개선을 요청했다. 김기현 회장은 “컴퓨터공학부 일부 전공선택 과목은 AI응용학과 학생들도 함께 신청해 수강 정원을 초과하다 보니 서면신청이 필수적”이라며 “컴퓨터공학부의 전공선택 과목 추가 개선을 요청한

다”고 전했다. 이에 김진한 입학처장은 “컴퓨터공학부 교원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강의 매매 현상을 규제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존재했다. 김동규(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강의를 사고 파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달라”며 “강의 매매가 적발됐을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익일 오전 9시에 다시 강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온라인 녹화강의 재사용 문제에 대한 건의사항도 뒤를 이었다. 김기현 회장은 “일부 교원이 과거에 촬영한 강의 영상을 재촬영해 강의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학생 설문 등을 통해 수강 학생의 절반 이상이 강의 품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교원에게 동영상상을 새로 제작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김희원(문콘 3) 창의대 학생회장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비교과 프로그램 ‘제6회 이마기انس 데이’가 신청자 수보다 수용인원이 적은 강의실에서 진행돼 학생들이 바다에서 강의를 수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웹엑스(Webex)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진행했지만 참여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 사전에 강의 참여를 신청했음에도 강의 수강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혁 학생처장은 “수강생 수 등 강의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 강의실을 배정했어야 하지만 잘못 이뤄졌다”며 “향후 비교과 프로그램 개최 시 수강생 수를 정확히 파악해 강의실 배정을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생활 및 복지 부문 안건

- 학생식당 관련 요구사항 제시
- 스쿨버스 운행 시간·경로 증대 요청
- 집중열람실 규정 미준수 단속 요구
- 학생회실 공간 요청
- 체육관 온라인 대여 개시 예정
- 야간잔류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 와이파이 연결 관련 불만사항 제기

학생식당에 대한 안건도 제기됐다. 이지우(인문 3) 인문예술대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자주 주문하는 메뉴의 가격 조정과 채식 메뉴 추가 등 메뉴 다양화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면류&찌개 음식도 포장 가능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영우 총무처장은 “학생식당 메뉴의 가격은 지난해 식당업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학생식당 메뉴 다양화 등의 건의사항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장 가능 메뉴 확대에 대해서는 “육회 비빔밥의 경우 위생 문제가 있고 국물 요리는 높은 온도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스쿨버스 개선을 요청했다. 장문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스쿨버스가 운영을 중단하는 시간대에도 최소 1대를 운행해 원활한 스쿨버스 운영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한성대입구 역뿐만 아니라 창신역 부근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해 스쿨버스 운행 경로를 증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스쿨버스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오류가 많아서 정확한 버스 운행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밝혔다. 장 처장은 “스쿨버스는 학생

들의 원활한 등교 지원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학생들이 더욱 편리하게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스쿨버스 앱 오류에 대해 김성길(정보보호팀) 팀장은 “버스에 탑재된 GPS장치의 오류를 확인해 조치했다”며 “버스 운행 중 길이 막혀 다른 경로를 이용할 경우 앱에서 버스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학술정보관 시설 관련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박지승(사회과학 4) 사과대 부학생회장은 “집중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열람실은 노트북 타이핑 등이 금지되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구(학술정보팀) 부팀장은 “집중열람실을 수시로 점검하고 순찰하면서 예약을 하지 않고 앉아 있거나 노트북 등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안건도 존재했다. 김희원 회장은 “우촌관 211호에서 ▲한국어교육트랙 ▲문학문화콘텐츠트랙 ▲문학문화콘텐츠학과가 학생회실을 함께 사용 중”이라며 “학생회실 출입 인원이 많아 문학문화콘텐츠학과 학생회실을 따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 처장은 “추후 공청하고 합리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상상관 체육관 개방에 대한 건의사항도 존재했다. 김형기 회장은 “상상관 지하 2층 체육관에 수업이 없을 경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처장은 “온라인으로 체육관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야간잔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서연(ICT 3)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은 “야간잔류 신청 시 절차가 번거로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문의했다. 이 처장은 “대학본부와 ADT캡스가 주요점을 두고 봐야 할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면 야간잔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와이파이 속도 관련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허준범(기계전자 3) 공대 부학생회장은 “교내 와이파이 연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속도도 느려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해 문제가 발생했지만 해결했다”며 “본교 홈페이지에 와이파이 연결과 관련한 안내문을 게재했고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QR코드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시각장애인 설비 미흡, 본부 “개선하겠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식 안내판 미설치 및 일부 관리 부실 문제와 화재 발생 시 시각장애인의 대피 관련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본교의 모든 건물을 조사한 결과, 1개 건물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부재하다. 일부 건물의 촉지도식 안내판은 시설 등의 변동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고, 물품 등의 비치로 인해 접근이 어렵다. 또한 다수의 비상구에 음성안내가 가능한 경보설비가 없고 비상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도 점자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비가 미비한 상태다. 대학본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등의 교육연구시설은 촉지도식 안내판을 각 건물 주 출입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건물 구조와 내부 시설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습관을 제외하고 본교 모든 건물의 주 출입구 인근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일부 건물의 촉지도식 안내판은 건물 구조 변동에 따른 최신화가 돼 있지 않은 채로 놓여 있다. ▲진리관 ▲탐구관 ▲공학관 A동 ▲상상관에 설치된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과거의 건물 구조 및 시설이 기재되어, 현재 해당 건물의 구조 및 시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진리관 3층의 촉지도식 안내판은 강의실과 실습실이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현재 진리관 3층에는 강의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탐구관 지하 1층 촉지도식 안내판은 최근 신설된 PBL 강의실 등이 반영돼 있지 않고, 공학관 A동 1층의 촉지도식 안내판은 상상파크 플러스와 디지털콘텐츠 제작실 등이 신설되기 이전 기준으로 기재돼 있다.

상상관 1층의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한성아카데미와 학생원스튜디언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의 구조가 안내돼 있다.

진리관 1층의 촉지도식 안내판의 주변에는 부피가 상당한 미술도구 등의 물품이 비치돼 있어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장애인이 최단거리로 이동하며 편리한 방법으로 시설이나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촉지도식 안내판의 문제와 관련해 윤진아(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촉지도식 안내판을 학내에 설치할 당시 학습관에 입주한 디자인아트교육원에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며 “관련 부서와 검토 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구조 변동에 따른 수정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진리관 촉지도

식 안내판 주변은 관련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점멸·음성 출력 기능이 탑재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설비는 탐구관과 연구관의 비상구에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 건물의 비상구에는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은 비상계단과 경사로의 손잡이에 층수와 위치 등을 시각장애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점자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점자표지는 ▲우촌관 3층 ▲진리관 1층 ▲연구관 1층 상상파크 입구의 계단·경사로 손잡이와 상상빌리지 비상계단 손잡이에만 부착돼 있으며, 나머지 건물 입구의 경사로 또는 비

상계단 손잡이에는 점자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 센터장은 이에 대해 “최근에 증축된 연구관과 과거 장애학생이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었던 탐구관에는 음성안내가 탑재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했고, 이외의 건물은 준공 당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으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상구유도등, 계단 점자표지와 같은 설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촉지도식 안내판 : 건물 실내 공간의 위치정보를 출력된 선과 면, 점자 등으로 간략하게 표시해 시각장애인에게 공간 정보를 촉각으로 알려 주는 안내판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임을 알리는 비상등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심민섭 기자 artiblanco@hansung.ac.kr

2차 대의원총회 마무리됐다

‘2024학년도 상반기 2차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9일 상상관 205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학생회칙 개정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세칙) 개정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 선거세칙 개정 ▲총학생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인준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학생회 예산안 인준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학생회칙 ▲선거세칙 ▲인문예술대 선거세칙 개정 안건은 재적 대의원 14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한 창의대 학생회 예산안 인준 안건은 재적 대의원 14명 중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면 총학생회 추경 인준은 재적 대의원 14명 중 9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개정된 학생회칙, 선거세칙과 인문예술대 선거세칙은 가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회칙, 선거세칙과 인문예술대 선거세칙의 자세한 개정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학생회칙 제17조 제5항 ‘AI응용학과, 문학문화콘텐츠학과를 제외한 창의대 1학년 대의원은 2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창의대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대의원은 2명으로 한다’고 개정해 상상력인재학부 소속의

1학년 대의원의 수를 2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창의대에 융합보안학과와 미래모빌리티학과가 신설되며, 기존 조항의 ‘AI응용학과, 문학문화콘텐츠학과를 제외한 창의대 1학년’이라는 표현이 상상력인재학부와 융합보안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소속의 1학년 학생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총대의원회 정·부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 정·부위원장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 정·부회장이 모두 꺾이되거나 탄핵된 경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전부 삭제됐다. 이에 꺾이 탄핵이 발생해도 현행 선거세칙 제35조 제1항과 제9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1월 총선거와 3월 재선거를 통해서만 상술한 학생대표를 선출한다. 김동규(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꺾이기 발생할 경우 바로 선거를 실행하면 온라인 선거를 위해 3백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각종 재원이 총학생회 재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기존 학생회칙 제75조 제1항에서는 ‘총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비나 기부금, 각종 행사 참가비 등 총학생회가 실제로 사용하는 재

정을 모두 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총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개정해, 현재 총학생회의 재정 운용 방향과 학생회칙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했다.

선거세칙에서는 타 조항을 지적하면서 조항 번호가 오기재된 5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등, 오타 수정을 위한 개정도 이뤄졌다.

인문예술대 선거세칙 또한 개정이 이뤄졌다. 인문예술대 소속 각 트랙의 트랙학생회장의 지위에 관해 규정하는 제3조 제4항에서, 폐지 또는 모집중지 등으로 인해 더이상 트랙 학생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여러 트랙과 학생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예술학부 소속의 각종 전공을 삭제하고, 트랙 명칭 변경 등을 반영했다. 또한 제5항에는 영미문학문화트랙 소속의 학생이 영미문학문화트랙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모집중지 및 신설,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사실상 하나의 트랙과 같이 운영되는 두 트랙의 학생들을 위한 조치다.

참관인*의 지위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관인의 업무까지 전부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던 인문예술대 선거세칙 제22조에 참관인의 지위, 임명, 의무, 자격 박탈 등에 관한 내



▲2차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찬성 팻말을 든 대의원들

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선거운동본부장의 자격만을 규정하던 제23조에도 참관인의 자격을 추가했다. 해당 규정의 개정에는 김형기(인문 4) 인문예술대 학생회장은 “선거운동본부장과 참관인 간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선거운동본부장의 의견을 수용해 인문예술대도 각자의 역할을 분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대동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1천만 원의 추경 인준을 요청했다. 장문수(컴공 4) 총학생회장

은 “행사기획 업체 측과 논의한 결과 무대 설치, 연예인 섭외에 드는 비용 등이 증가했다는 설명을 들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천만 원의 추경 편성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자료 등을 통해 추경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인해 재적 대의원 14명 중 9명이 반대표를 던져 총학생회 추경 인준은 부결됐다.

3월 재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3대 창의대 학생회 ‘FERE’는 상반기 예산으로 1,309,740원을 인준 받았다.

세부 항목으로는 ▲창업 E-스포츠 대회 ▲성년의 날 ▲대동제 ▲창업 소모임 지원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자보 ▲프린트 대여 사업 ▲간식사업 ▲사업예비비 ▲일상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참관인 : 각 후보를 대신해 해당 투표소에 배치돼 투표 진행을 감독하는 사람
**선거운동본부장 : 선거 기간 동안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는 사람

김태형 기자 kth123@hansung.ac.kr

총장과의 소통의 장, Lunch with the President



▲대학본부 관계자와 참가자들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식사하고 있다.

총장과 재학생이 함께 식사하고 학교생활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Lunch with the President’ 행사가 지난 8일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이창원 총장, 장명희 교학부총장, 이상혁 학생처장을 포함한 대학본부 관계자 5명과 12명의 재학생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케이키친 한상’에서 준비한 음식을 즐긴 후 간단한 대화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전공 선택 등에서 이 총장의 조언을 구하는 등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해 이용 편의를 높여달라는 요청사항이 존재했다. 컴퓨터공학(부티 1) 학생은 “각 여자 화장실마다 생리

대를 비치한다면, 생리대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처장은 “현재 생리대가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실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화장실마다 비치돼 있는 것이 더욱 편리하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내 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의 개선을 요청하는 안건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이레(사회과학 1) 학생은 “교내 근로 학생을 공정한 기준이 아닌 조교의 인맥을 통해 선발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교내 근로 학생 선발 시 공정한 선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학교 측에서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학생은 또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본교의 슬로건인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성, 한성으로 모여드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교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수를 늘릴 뿐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외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서영(사회과학 1) 학생은 “사막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추후 행사가 다시 열린다면 참여할향이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독서 브이로그 공모전 진행

‘2024학년도 상상독서 브이로그 공모전’(이하 독서 브이로그 공모전) 참가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독서 브이로그 공모전은 학술정보관이 진행하는 ‘상상독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서와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공모전이다. 개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휴학생은 제외된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가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심사는 학술정보관장과 학술정보관 직원 3명이 진행한다. 평가 기준은 ▲창의성(30점) ▲작품성(30점) ▲정보전달력

(40점)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29일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와 수상자 개별 연락으로 발표된다.

시상은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을 선발한다. 학술정보관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순위에 따라 인당 50만 원, 15만 원, 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참가 보상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비교과포인트 40pt와 상상독서마일리지 40M이 지급된다.

공모전과 관련해 이영원(학술정보팀) 팀원은 “시청 후 책을 읽고 싶어지는 브이로그가 수상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의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 artiblanco@hansung.ac.kr

대플센터 개소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대플센터) 개소식이 지난달 30일 열렸다. 개소식은 교내 구성원에게 대플센터를 알리고자 기획됐다. 대플센터는 ‘진로취업지원팀’과 ‘지역청년고용팀’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본교 재학생 등의 진로·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사에는 이창원 총장과 장명희 교학부총장 겸 대플센터장, 김재은(사회과학 3) 부총학생회장 등 교내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시설 투어 ▲2부 개소식 ▲3부 오찬 등 총 3부로 나뉘어 열렸다. 1부는 상상관 B105호에 위치한 대플센터 앞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한 뒤, 상상관 지하 2층 대플센터 소속의

진로취업상담실을 시찰했다. 2부는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로 이동해 ▲개회사 ▲홍보 영상 시청 ▲내빈 소개 ▲총장 및 부총학생회장 축사 ▲대플센터 소개 등이 진행됐다. 3부는 한상에서 개소식 참가자 간 오찬이 진행됐으며, 오찬 이후 폐회사를 진행했다.

개소식에서 장 센터장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 취업 성공을 돕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지역 사회와 산업 현장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대플센터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 artiblanco@hansung.ac.kr

블라썸 페스티벌 성료

제2회 블라썸 성북천 페스티벌(이하 블라썸 페스티벌)이 열렸다. 행사는 지난달 27일, 성북천 분수마루광장에서 성북천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개최됐다. 성북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본교 캠퍼스타운사업단 등이 주관한 블라썸 페스티벌에는 본교 이창원 총장과 김영배 성북구갑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의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장터 ▲플리마켓 ▲공연으로 이뤄졌다. 본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입주기업은 전통 공예품 등을 판매하며 상품 홍보를 위해 공연도 펼쳤다. “들불”, “왕산악” 등 본교 동아리와 졸업생의 공연도 이어졌다. 공연에 참여한 김경민(인문

3) 들불 회장은 “동네 주민과 학생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곡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과 성북천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행사를 기획한 고요찬(성북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이사는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성북구와 한성대학교가 화합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현진(캠퍼스타운사업단) 팀장은 “본교와 학생, 지역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릴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거리로 나선 노동자, 노동권 확보로 가는 행진

‘2024년 세계노동절대회(이하 노동절대회)’가 지난 1일 개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 실현을 위해 입을 모았다.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134년의 시간

134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절대회는 19세기 처음 시작됐다. 5월 첫째 날을 기념해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린다. 1800년대 중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기업들이 성장했고, 국가 권력과 결탁해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그들의 권익 보전을 위해 결탁했다. 1890년 5월 1일, ‘민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국, 프랑스 등 국가에서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노동절대회가 열렸다.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위해 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해 행사를 가졌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 변경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휴일인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노동계에서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이 이원화되는 현상을 지적해 노동절 행사도 5월 1일로 옮겨 근로자의 날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캠퍼스 속 소외된 노동자

노동절대회에서 노동권 보장 및 노동환경 보장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열악한 노동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립대학 청소노동자들이다. 이들이 한 달 동안 지급 받는 식대는 12만 원이다. 청소노동자는 오전 6시경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 두

끼를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 식대를 한 끼 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2,700원이다.

이에 청소노동자 측에서 한 달간 제공받는 식대를 14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수용되기 힘들 전망이다. 올해 노동자의 시급이 270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 측에서는 원청업체인 대학 측에 식대를 인상해달라고도 요구하지만, 이들을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곳은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이뤄지기 힘든 현상이다.

노동권 쟁취를 위해 거리로 나서다

이 같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이 한데 모였다. 지난 1일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노동절대회가 개최됐다. 서울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다. 대회는 개회사, 각 노동조합(이하 노조) 대표자의 격언, 행진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신수연(서비스연맹 특성화노조) 경기지부장은 “현장실습생은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며 “현장실습생도 노동법을 적용받도록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동절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권달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 이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네팔 농업노동자 암릿 립무 씨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숫자만 늘리고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시도하는 등 권리를 줄이고 있다”며 “차별없이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절대회에 참여한다”고 슬로했다. 김정원(금속노조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 노동절대회에 참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은 “국적과 인종, 성별, 장



▲세종대로 노동절대회 현장, '노동 해방' 깃발이 크게 흔들린다.

애유무 등으로 고용 형태에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노동 현장을 조성하자”며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현장발언에서 손경숙(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화성오산지회) 지회장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꼬집었다. 김준순(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원자력학원세비지부) 부지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윤(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청년위원장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노동절대회에 참여한 노조가 다 같이 고용노동청 방면으로 행진이 진행됐다. ▲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화성식품노조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조연맹 ▲전국대학노조 ▲전국언론노조 ▲전국국직원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전국국속노조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조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순서로 행진이 이어졌다.

이번 노동절대회에는 청년 단체도 참가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 단체인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가 함께했다. 이은지(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위원은 “현재 노동 탄압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노동 탄압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하고 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고 판단해 참석했다”며 “많은 노동자가 모인 만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조에서도 본 대회에 참가했다. 노중기(전국교수노조 한신대학교지부 한신대학교지회) 지회장은 “대학생의 등록금 등 생활과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바뀌어야 하지만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며 “많은 교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교의 노동자 또한 노동절대회에 참여했다. 윤구(전국대학노조 서울지역본부장) 한성대학교지부장은 “전국대학노조 서울지역본부 모든 지부는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위해 매해 대회에 참여한다”며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동권 및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이후 맞이한 첫 번째 노동절대회였다. 총선에서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함에 따라 노조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 여부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노조 활동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 및 노동권 간의 대립의 끝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에 참여한다.



▲팻말을 들고 행진에 참여하는 노동절대회 참가자

그 법의 어제와 오늘

경상남도 함안군의 한 도로에서 지난달 24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운전자가 자신의 손녀를 태운 SUV 차량을 몰던 도중 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차량이 전복됐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가 멈추지 않았으며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2010년~2022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 7662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이번 사고 역시 차량의 급발진이 원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다. 때문에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임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조항이 규정된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만들

소비자에게 과중된 입증 부담, 제조물 책임법

어졌다.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가 직접 제조물의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제조업자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기 전, 제조물 결함 등으로 인한 책임 주체에 대한 논의가 유럽에서 처음 이뤄졌다. 1985년 유럽연합에서 『제조물책임지침』을 통과시킨 후 해당 지침에 입각해 일본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법률이 1994년에 공포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해당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제조물 책임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00년 1월 12일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됐고 2002년 7월 1일 시행됐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 제조업자에게 피해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제조물 책임법』 제

3조의2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입은 피해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입은 손해라는 점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점 ▲제조물의 결함이 아니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 제조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 개인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직접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종선(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소비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정도가 너무 높아 법원에서 쉽게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병목(사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제조물의 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극히 부족한 소비자가 직접 제조물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사가 제조물 관련 자료를 소비자에

게 제공할 의무가 『제조물 책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조물 관련 자료 확보가 필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제조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오학준(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은 “제조물 결함을 입증할 증거 확보부터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제조업자가 제조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에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 재판에서 제조업자로부터 제조물의 설계도면 1장조차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즉 제조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하는 조항을 아

예 삭제해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더는 방안이 주로 제기된다. 하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이기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사가 제조물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재판 전 당사자 간에 관련 증거를 미리 교환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도입된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주일(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만큼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 소비자가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문서 자료 제출 및 증언 녹화 등의 증거물을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조물 책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500에서 600, 우리 항상 그곳에 있었다

〈편집자주〉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불리며, 이는 대학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언론이 존재하듯, 대학에서도 대학의 운영을 주도하는 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를 견제하는 대학언론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 운영이나 학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학내구성원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것 또한 대학언론에게 주어진 역할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의 대학언론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이 문제는 새로움을 잃은 지 오래다. 취업 등의 현실적 문제를 겪는 학생들은 대학언론에 관심을 갖기 어렵고, 그러한 틈을 타 일부 대학의 본부는 대학언론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욱 다양해지며 위기는 심화됐다. 이에 본지가 500호를 발행한 2015년 이후, '대학언론의 위기'라는 비켜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구성원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어떤 학내 사안을 지면에 담아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떠한 사안에 집중해야 학내 구성원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1

학내 구성원의 충격 자아낸 'D+ 등급'

본지가 500호를 발행한 2015년은 본교에게도 역사적인 한 해였다. 본교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각 대학의 교육여건이나 학생관리 등을 기준으로 진행했던 평가다. 당시 결과에 따라 본교는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받았다. 본지는 본교가 어떤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등 자세한 결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본교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 등은 무엇인지 알리는 기사를 내놓으며 학내 구성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일부 학생과 교수진이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회와 대학본부 등에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에 관한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며, 학내 구성원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2

트랙제 전면 도입,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본교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트랙제'의 도입이 확정된 해가 2016년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된 교육부의 컨설팅 내용에는 '대학의 특성화와 연계된 학사구조개편'이 존재했고, 그에 따라 본교는 2017학년도부터 트랙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트랙제 도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용학과 현대무용전공 폐지 결정에 따른 학생들의 반발과 학사구조개편 과정에 있어 학생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학생들의 여론을 보도함으로써,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학사 운영 과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3

트랙제 도입 첫 해, 다양한 개선 의견 제기

2017년의 본지는 트랙제 도입 첫 해에 학생들로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을 두 차례에 걸쳐 기사로 다뤘다. 트랙제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학부별로 등록금이 다름에도 같은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상황을 학생들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소속감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보도했다. 학생들이 제기한 일부 문제에 대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대학본부의 의견 또한 지면에 담아냄으로써, 문제 제기를 통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4

'자율개선대학'으로의 도약

2018년에는 학과 사무실 통합 등 트랙제에 적합한 행정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등을 다뤘다. 그와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후속으로 진행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본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며 위상을 지켜낸 사실도 지면에 담았다. 자율개선대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의 제한 조치가 해제된 대학이다.

5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자리걸음'

서면신청을 위한 '밤샘 대기' 사태와 장학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이 2019년 1학기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자, 본교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복합적인 불만 의견이 표출됐다. 이에 본지는 1, 2학기에 각각 1회씩 본교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직원 및 조교 대상의 교육·평가를 개선하겠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 2학기에 진행된 조사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제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도 했다.

10

앞으로의 <한성대신문>, 학생 권익에 더욱 집중해야

본지는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도하되, 교수·직원·학생 중 학사 행정에 관한 정보를 얻기 가장 어려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기사를 내보내려 노력했다. 독자들은 앞으로도 본지가 학생들이 불편 사항을 대학본부나 학생자치기구 등에 표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2학년 재학 중인 유승연 학생은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도할 만한 주제를 찾는 노력을 통해 객관성을 가지고 학내 소식을 전달한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슬기(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는 "학생들은 언제나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신문사가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9

학생을 넘어 직원의 권익도 대변해온 <한성대신문>

제11대 총장선출이 치러진 지난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한성대학교지부(이하 노동조합)가 직원의 총장선출투표권 확대를 요구했으며, 이에 본지가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총장선출 방식에 관한 설명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최종적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기사의 발행을 통해 향후 노동조합의 계획과 입장 등도 함께 알릴 수 있었다. 또한 본교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과 목욕시설을 고발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일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은 지하나 주차장 인근 등 상대적으로 기피되는 장소에 위치해 있는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 대학본부의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8

대면수업 본격화,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들

2022년에는 대면수업이 재개되며 발생한 문제점을 취재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기사를 보도했다. 1학기에는 야간 소속 학생들을 위한 학내 시설의 운영이 미흡한 점에 대해 취재해 기사를 작성했다. 야간학부의 존재라는 본교의 특징에서 착안한 이 기사를 통해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던 불편 사항을 대학본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2학기에는 소방안전을 위한 설비에 개선이 필요한 점을 취재했다. 특히 소방설비에 관한 문제점은 각 건물별, 층별로 지적하면서, 대면수업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데 성공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 대학본부는 문제점을 하나씩 시정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기도 했다.

6

대학본부, 코로나19 대응방식 학생대표와 끊임없이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던 2020년에는 등록금 환불과 비대면 녹화강의 질적 문제,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된 4차례의 학생대표 간담회를 취재해 보도하는 데 집중했다. 대학본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관한 학생 대상의 만족도 조사도 진행함으로써, 장기화되는 방역조치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불만 사항과 의견 등을 정리하는 역할 또한 수행했다.

7

학생들의 우려 발생시킨 트랙 구조조정

2021년, 대학본부가 트랙 구조조정 관련 사항을 3번의 학생대표 간담회를 통해 발표했다. 본지는 학생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행정적 절차와 트랙 폐지에 관한 규정 등을 함께 설명하는 기사를 보도해, 정보 파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3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의 선거운동본부 각각을 인터뷰해 유권자인 학생들의 선택을 돕는 등, 학생사회가 다시 활성화되는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한반도에 지진 안전지대란 없다

대만에서 규모 7.4에 이르는 지진이 지난달 3일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이는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되며 많은 이들이 놀란 반응을 보였고, 한반도의 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다시금 피어올랐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경상남도 함천군 일대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이나 대만 등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 피해가 적어 '안전지대'로 불렸던 한반도는 과연 지진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지진의 발생 원리와 한반도의 지층 등을 파악하면,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

지진의 사전적 정의는 '지구 내부 암석층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파동에 의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려면 지구 내부의 구조와 '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지구는 가장 안쪽부터 순서대로 ▲내핵 ▲외핵 ▲맨틀 ▲지각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맨틀은 지표면으로부터 30~2,900km 아래에 위치한 암석인데, 깊이 670km를 경계로 상부 맨틀과 하부 맨틀로 나뉜다. 외핵과 내핵을 합친 중심핵은 지구의 가장 안쪽에 있으며, 지각은 지구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암석층이다.

상부 맨틀과 지각으로 이뤄진 단단한 암석 덩어리를 '판'이라고 부른다. 지구의 표면은 유라시아판, 필리핀 판, 태평양판 등의 다양한 판으로 이뤄져 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의 경계 부분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다. 오창환(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한반도는 주위에 태평양판, 필리핀판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며 "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지 않지만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판은 맨틀에서 발생하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움직이게 된다. 대류 현상이란 높은 온도를 가진 액체와 기체는 아래로 내려가고, 낮은 온도의 액체와 기체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중력이 만들어내는 압력으로 인해 하부 맨틀 중에서도 외핵에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상부 맨틀에 가까운 쪽은 온도가 낮다. 하부 맨틀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인 '유체' 상태로 존재하기에 대류 현상이 발생하며 하부 맨틀은 계속해서 위 아래로 순환하게 된다. 이 현상이 하부 맨틀 위로 붙어 있는 상부 맨틀과 지각으로 이뤄진 판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최진혁(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조 연구센터) 센터장은 "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판 밑에 위치한 하부 맨틀의 움직임에 따라 저절로 판이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의 움직임은 '탄성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탄성에너지는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탄성에너지가 발생하는 판 안의 지점을 '진원'이라고 부르며, 판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에 따라 진원에서 발생하는 탄성에너지의 크기도 커진다. 최 센터장은 "판의 이동 속도에 따라 진원에 축적되는 탄성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판의 움직임과 탄성에너지는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층을 깨뜨린다. 그러한 균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파동이 함께 생긴다. 이 파동은 깨진 암석층의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땅에 진동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지진이다. 최 센터장은 "탄성에너지가 판 안에서 많이 쌓이면 암석층이 균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동에너지도 커진다"며 "이는 결국 더 큰 규모의 지진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판의 움직임과 탄성에너지로 인해 갈라진 암석층의 부분은 '단층'이라고 불린다. 단층은 '주단층'과 '가지단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단층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고 깊이도 깊다. 주단층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온 단층이 가지단층이다. 하나의 주단층과 뻗어나간 가지단층들은 '단층대'라 통칭하며, 특정 지역에 모여 있고 방향이 유사한 여러 단층대를 묶어 '단층계'라 명명하기도 한다. 최 센터장은 "특정 지역에 있는 단층대들은 길이에 상관없이 방향이 같지만 하면 하나의 단층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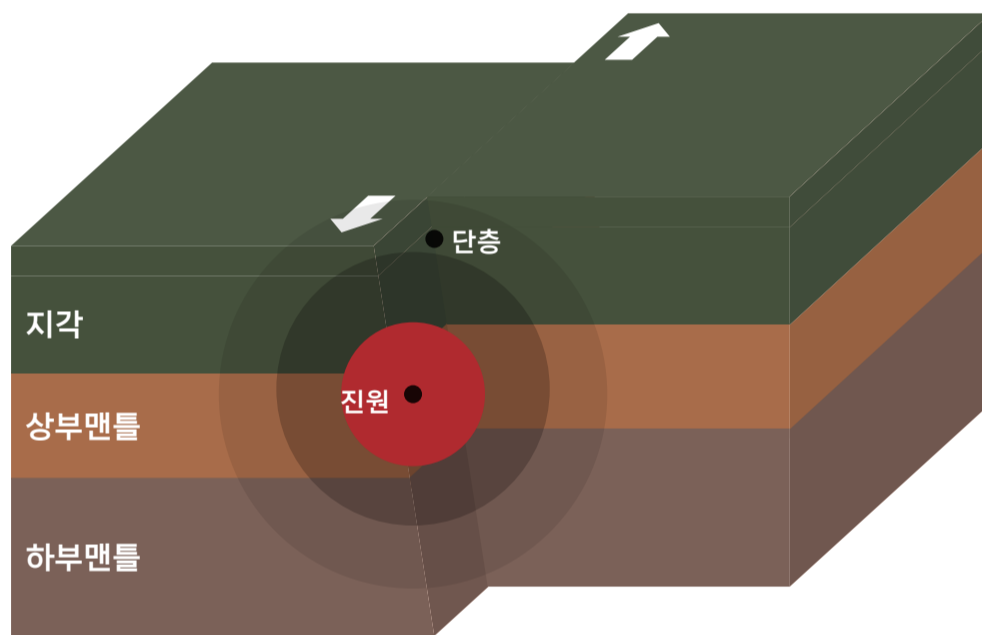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단층으로, 가까운 미래에 다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부른다. 즉 활성단층은 여러 단층 중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단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상이해, 특정 단층의 활성단층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최 센터장은 "단층이 생겨난 곳은 이미 한번 판에 상처가 났다고 볼 수 있다"며 "한번 다친 판은 지반이 약해져 또 다시 다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최근에 생겨 판의 상처가 아물 겨를이 없던 활성단층에서 지진의 재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2014년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가 '활성단층정비기획단'을 꾸려 '현재로부터 약 260만 년 전 이후에 생성된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위치하는 여러 단층들 중 활성단층은 2021년 기준 21개로 추정된다. 최 센터장은 "활성단층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며 "국내에서 활성단층정비기획단'을 통해 활성단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을 통해 활성단층을 연구해 개수를 추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1개의 활성단층 중 가장 최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층은 '양산단층대'다.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던 2016년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서 규모 5.8의 '9.12 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바로 양산단층대의 가지단층인 '내남단층'이다. 내남단층이 포함된 양산단층대는 9.12 지진 발생 이후 약 5개월 동안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지속됐다. 9.12 지진 발생 1년 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역시 양산단층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양산단층대 내 암석층을 입자크기, 색상 등으로 세밀하게 연구한 결과 양산단층대가 최대 규모 6.7 이상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9.12 지진보다도 큰 규모의 지진이며,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한다. 양산단층대가 주로 위치한 경주뿐 아니라 국가 주요 시설물이 밀집된 부산, 대구, 울산, 포항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수도권 인근에도 활성단층이 존재하는데, 바로 '추가령단층'이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에서만 규모 3.0 이하의 지진이 150여 회 발생했다. 9.12 지진 이후 연 평균 지진 발생 빈도가 5회에서 30회로 증가한 만큼 9.12 지진이 수도권의 지반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약해진 지반에 추가령단층에 의한 미세한 지진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 크고작은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9.12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지진이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령단층이 지나 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강원도 서쪽은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이 넘는 약 2천 5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같은 규모의 지진일지라도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한반도에도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활성단층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지진에 관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여러 활성단층의 활동 징후나 위험성을 미리 인지해 지진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파악한다면, 더욱 철저한 지진 대비로 큰 규모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석(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교수는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 해당 활성단층의 영향을 받는 지역 건물의 내진설계 규제를 강화하거나 지진대피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며 "추후 발생할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땅의 갈라짐이 지표까지 올라온 활성단층이 지진의 위험이 더 높다"며 "활성단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1개의 활성단층 중 가장 최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층은 '양산단층대'다.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던 2016년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서 규모 5.8의 '9.12 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바로 양산단층대의 가지단층인 '내남단층'이다. 내남단층이 포함된 양산단층대는 9.12 지진 발생 이후 약 5개월 동안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지속됐다. 9.12 지진 발생 1년 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역시 양산단층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양산단층대 내 암석층을 입자크기, 색상 등으로 세밀하게 연구한 결과 양산단층대가 최대 규모 6.7 이상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9.12 지진보다도 큰 규모의 지진이며,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한다. 양산단층대가 주로 위치한 경주뿐 아니라 국가 주요 시설물이 밀집된 부산, 대구, 울산, 포항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수도권 인근에도 활성단층이 존재하는데, 바로 '추가령단층'이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에서만 규모 3.0 이하의 지진이 150여 회 발생했다. 9.12 지진 이후 연 평균 지진 발생 빈도가 5회에서 30회로 증가한 만큼 9.12 지진이 수도권의 지반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약해진 지반에 추가령단층에 의한 미세한 지진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 크고작은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9.12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지진이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령단층이 지나 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강원도 서쪽은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이 넘는 약 2천 5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같은 규모의 지진일지라도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한반도에도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활성단층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지진에 관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여러 활성단층의 활동 징후나 위험성을 미리 인지해 지진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파악한다면, 더욱 철저한 지진 대비로 큰 규모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석(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교수는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 해당 활성단층의 영향을 받는 지역 건물의 내진설계 규제를 강화하거나 지진대피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며 "추후 발생할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땅의 갈라짐이 지표까지 올라온 활성단층이 지진의 위험이 더 높다"며 "활성단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규모 : 지진 발생 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김태형 기자 kth123@hansung.ac.kr

몽치면 더욱 강해지는 초소형 '군집'위성

지난달 24일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NEONSAT (이하 네온셋)'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 1호기를 기점으로 10기가 추가로 발사돼 2027년에는 11기의 네온셋이 군집의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11기의 네온셋은 ▲한반도 지역 이미지 촬영 ▲자연재해 경보 ▲안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네온셋처럼 동일한 임무를 부여받고 지구 궤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도는 100kg급 소형 위성 무리를 초소형 군집위성이라 정의한다. 하나의 위성 대신 여러 대의 위성을 동시에 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공위성보다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조한철(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력연구원) 교수는 "네온셋은 여러 대가 분포해 한반도를 상시 촬영하고 재난 재해가 발생한 관심 지역을 촬영한다"고 전했다.

네온셋은 주 임무인 한반도 촬영을 위해 주파수 대역인 'S 밴드'와 'X 밴드'가 활용된다. 네온셋과 기지국이 소통할 때 주파수를 이용하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며 정보를 먼 거리까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낮은 주파수 대역은 문자 등 용량이 작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된다. 반면 주파수 대역이 높으면 이미지 파일 등 용량이 큰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용이하기에 상황에 맞는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궤도에 투입된 위성은 기지국에서 내리는 명령을 수신하기 위해 S 밴드를 사용한다. 2~4GHz(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S 밴드를 활용해 명령을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다. 위성에 명령을 내리는 코드

는 보통 알파벳 등 간단한 문자로 이뤄져 있어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준호(세종대학교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위성에 임무 수행 명령을 전달할 때 저용량의 문자를 빠르게 보낼 수 있어 S 밴드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위성이 기지국으로 사진을 전송할 때는 주파수 대역이 8~12GHz인 X 밴드를 사용한다. 사진 파일은 명령 코드의 문자보다 용량이 크기에 대용량 데이터를 송신하려면 높은 주파수 대역이 효과적이다. 조 교수는 "위성이 촬영한 데이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X 밴드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네온셋은 오는 2027년까지 10기가 더 발사돼 한반도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1호기 발사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 확인이 목적이었다. 최종적으로 2026년과 2027년 각 5기씩 추가로 발사해 군집의 형태를 갖추게 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앞으로 발사될 10기 모두 이번 발사한 1호기와 동일한 설계가 적용된다"며 "여러 대의 위성이 넓은 지역을 더 자주 촬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네온셋은 어떻게 우주까지 도달할까. 네온셋은 위성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우주까지 도달할 수 없어 발사체에 위성을 탑재한 뒤 발사해야 한다. 실제로 1호기의 경우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센터에서 로켓랩사의 일렉트론 발사체에 실렸으며, 이후부터는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위성은 발사되면서 두 차례가량의 발사체 분리 과정을 거친다. 발사체가 분리하면서 위성을 목표 궤도까지 보낼 수 있는 추진력도 함께 얻는다. 김해동(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각 단계 분리될 때 연소를 통해 위성의 속도를 가속화한다"며 "위성은 지구 중력과 별개로 특정 궤도를 설정해 돌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위성이 정상적으로 목표 궤도에 진입하면 음금신호라고 불리는 비콘(Beacon) 신호를 통해 발사 성공 여부를 알린다. 15초간 신호를 보내고 45초 동안 대기하는 과정을 반복해 인공위성은 기지국에 자신이 제대로 동작하기 시작했다고 알린다. 발사 후 기지국에서 해당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다면 위성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본다. 김오중(세종대학교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지상에서 비콘 신호를 수신하는 것은 인공위성이 발사체로부터 무사히 분리 후 통신 안테나 전개도 무사히 수행돼 통신이 가능한 상황까지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위성은 지구와 통신하기 위해 적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안테나가 지구 방향을 향하거나 태양전지판이 태양 쪽을 바라보게 위치해야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사체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위성은 엄청난 움직임을 반복한다. 이를 텀블링(Tumbling)이라고 하는데, 텀블링의 정도를 감쇠시켜야 위성의 자세가 안정화돼 임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조 교수는 "위성이 발사체와 분리되

면서 발생하는 텀블링을 감쇠시켜 자세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궤도에 정착한 이후에는 위성의 안정적인 자세를 위해서 '반작용 휠(Reaction Wheel)'과 '자기장 토크(Magnetic Torquer)' 등이 사용된다. 궤도를 회전하는 인공위성은 지구의 중력 등 많은 요소로 인해 쉽게 흔들린다. 반작용 휠은 인공위성이 흔들리는 방향을 분석해 반대 방향으로 바퀴를 돌려 인공위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자기장 토크는 자석 코일로 감긴 원통형 봉 형태로, 기준 축으로부터 비틀어지면 자기장 토크가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해 위성의 수평을 맞춘다. 김오중 교수는 "인공위성의 자세 제어는 기지국과의 통신, 목표지향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계속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네온셋 1호기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는 KAIST와 여러 국내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 주도 하에 이뤄지는 우주 산업인 '뉴 스페이스'로의 전환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현(KAIST 인공위성연구소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 사업단장은 "네온셋 발사 성공은 국내 우주 산업에 뉴 스페이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동시에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기나긴 역사로 향하는 발걸음

홀로 만들어지지 않은 역사이기에 더욱 영광스러움을 느낀다. 수많은 이들의 열정어린 땀과 고민이 있었기에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테다. 지령 600호를 편집국장으로서 기념할 수 있어 큰 기쁨을 느끼면서도,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끔 또 하나의 돌을 쌓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오랜 역사가 찬란한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듯, 본사를 포함한 여러 대학언론은 오래 전부터 위기를 겪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언론은 대학본부의 숏한 편집권 침해 속에서도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동체적 가치관의 약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독자의 관심이 낮아진 것 또한 위기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특히 다수 대학언론이 '1번 독자'로 상정하던 학생의 무관심이 가장 먼저 극복되어야 할 위기로 꼽힌다. 취업난과 같은 현실적인 고민으로 인해 학생들이 대학을 거처가는 단계로 생각하게 되고, 학교에 대한 관심 저하가 자연히 대학언론에 대한 관심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언론이 스스로 학내에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학사구조개편처럼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기사로 다루고, 학내 시설의 안전 문제 등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때면 대학언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학본부의 제재로 인해 대학언

론이라는 이름만 유지한 채 홍보성 기사만 내보내는 곳은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대학언론은 또한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넘어, 학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 첨병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명확한 비판 근거를 찾기 위해 날카로운 시각으로 취재를 진행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테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독자의 관심도를 제고하지 못한다면 대학언론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고, 더욱 먼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읽는 이 없는 신문은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으니 말이다. 결국 독자의 관심을 제고하려면 외부적인 요인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언론으로서 본래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지 언론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본지 또한 언론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물고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오로지 독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의 응원과 열독은 또한 본지가 강조하고 싶은 바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독자의 성원 속에 더욱 먼 미래에 700, 800호와 그보다 긴 역사를 맞이할 <한성대신문>을 위해, 오늘도 대학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기겠다.

정상혁 편집국장

■ 의화정

두고두고 꺼내어 쓰고픈 처방전

얼마 전, 아주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직전에 시작한 야학 생활. 교사가 꿈이었던 나는 야학 교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단숨에 지원하려 갔다.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싶어하시는 어르신들께 중학교 과정의 국어와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자원 봉사였다. 중구에 위치한 야학은 여러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들을 대상으로 저녁에 네 시간씩 가르치는 공간이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러 야학에 오셨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께 알은 지식이나 함께하고자 했던 여러 대학생들. 저녁 시간에 수업이 진행되는 터라 2시간 공부하고 간단히 만든 저녁을 함께 먹고 나머지 2시간을 공부하는 일정이었다. 수업을 마치는 10시 30분이 되면 우리는 하나같이 근처 음식점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지는 일상을 되풀이했다.

그렇게 보낸 1년 여의 시간들. 시작 단계에서부터 1년 이상은 해야 한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던 곳이었기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매우 길게 이어졌다. 나와 같이 야학 교사에 지원한 대학생 친구들은 야학에 있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다.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배우게 된 삶의 자세와 열정들. 함께 나누는 것의 의미,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보낸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 끼친 영향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순간, 지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다. 때로는 1년 만에, 때로는 2년 만에, 때로는 3년 만에 만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속내를 털어놓고 푸념도 늘어놓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면서 세월도 흘러갔다.

인생을 살아갈 때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나를 따듯한 기억 속으로 몰고 가는 추억들이 특히 그렇다. 찬란한 20대에 마주하게 되는 무수한 경험들. 그 경험들 속에서 만나는 뭘, 두고두고 꺼내어 보고 싶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는 20대의 아름다운 시간. 그리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하며 지내게 될지 모르는 관계들. 지금 내 옆에 있는 관계들과 추억들은 인생의 힘든 순간에 나에게 전해지는 맞춤형 처방전이 될지도 모른다.

늦은 시간, 야학 근처를 찾아갔다. 야학이 있던 위치도 주변도 많이 변해 버렸지만, 순간순간 기억나는 추억들은 늘 같은 이미지로 되살아났다. 이상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이런 추억들은 또 다시 나에게 위로가, 약이 되어 줄 거라고 믿는다. 나의 학생들도 이러한 처방전을 만들 수 있는 20대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노정은(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굳게 닫힌 소통의 문

서울시가 민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4일 서울 시청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동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개탄했다. 서울시는 임금 기준과 처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다. 그러나 서울시는 형식상 사용자는 민간 기업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노동자도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교섭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기자수첩

법 테두리 밖의 노동자를 위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제134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지난 1일 세종대로를 찾았을 때였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됐다. 실제로 직장감찰119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의 공휴일 유급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휴일 유급휴식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중 하나다.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노동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휴일 유급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것 외에도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에 따른 임금을 받을 권리'조차 지켜지지 못해 2020년 국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9만여 명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이용해 사업주는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가 밀린 임금 지급이나 계속 고용 여부 등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볼모 삼아 신고를 철회하게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근로기준법』의 다수의 조항은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영세한 사업장은 세세한 법률을 모두 준수하며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 명목이다. 하지만 직장의 규모가 작다는, 노동자가 스스로 개선해볼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은 노동자에게 가혹한 처사다. 또한 실상은 5인 이상의 노동자들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에게 쉼수를 제공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보다 처벌에 따른 피해가 커져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준법 의식을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테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차등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다. 전체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낙산에 올라

프로야구 AI 심판, 졸속 도입인가

최근 한국 프로야구에 AI 로봇 심판이라고도 불리는 ABS 시스템이 전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ABS 시스템은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으로, 투수가 공을 던지면 불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인간이 직접 판단-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야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공의 궤적을 파악하고 컴퓨터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여 매우 정확하게 투구 결과를 결정하는 AI 심판의 등장인 것이다.

평소 심판의 일관적이지 못하고 다소 부정확한 판단에 불만을 가지던 관중들은 이러한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리는 AI 심판에게 적응하면서 큰 환호를 하고 있다. 또한, 선수단 입장에서도 부가적인 비디오 판독 요청이던지, 판정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여 퇴장당할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이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ABS 시스템의 도입은 가히 혁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AI 심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이 AI 심판의 판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몇 선수들이 의견을 내면서 AI 심판의 도입은 졸속 도입이라는 선수단과 KBO 협회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ABS 시스템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국내로 돌아와 KBO 리그에 복귀한 류현진은 ABS 시스템에 대해 경기마다 판정이 다르다며 AI 심판의 불공정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고, 전 메이저리그 선수인 황재균은 ABS 시스템의 판정에 아픔을 당하자 헬멧을 벗어던져 퇴장을 당하는 등 선수단 내부에서 AI 심판에 대한 강력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수단의 항의에 더불어,

경기장 카메라에 벌레 및 이물질이 잡히면 투구 추적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와 빗줄기로 인해 ABS가 투구 추적에 방해 받는 문제도 덩달아 논란이 되면서 충분한 검증이 거치지 못하고 ABS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불어나고 있다.

과연 이 ABS 시스템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하고 도입 시기에만 집중된 졸속 도입인 것일까? 아니면 그저 기존 인간 심판에 대한 익숙함에서 터져 나온 불만인 것일까? 이 문제는 앞으로 KBO에서 ABS 시스템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일 것이고, 선수단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여 모범사례로 남기를 바란다.

이원준(검공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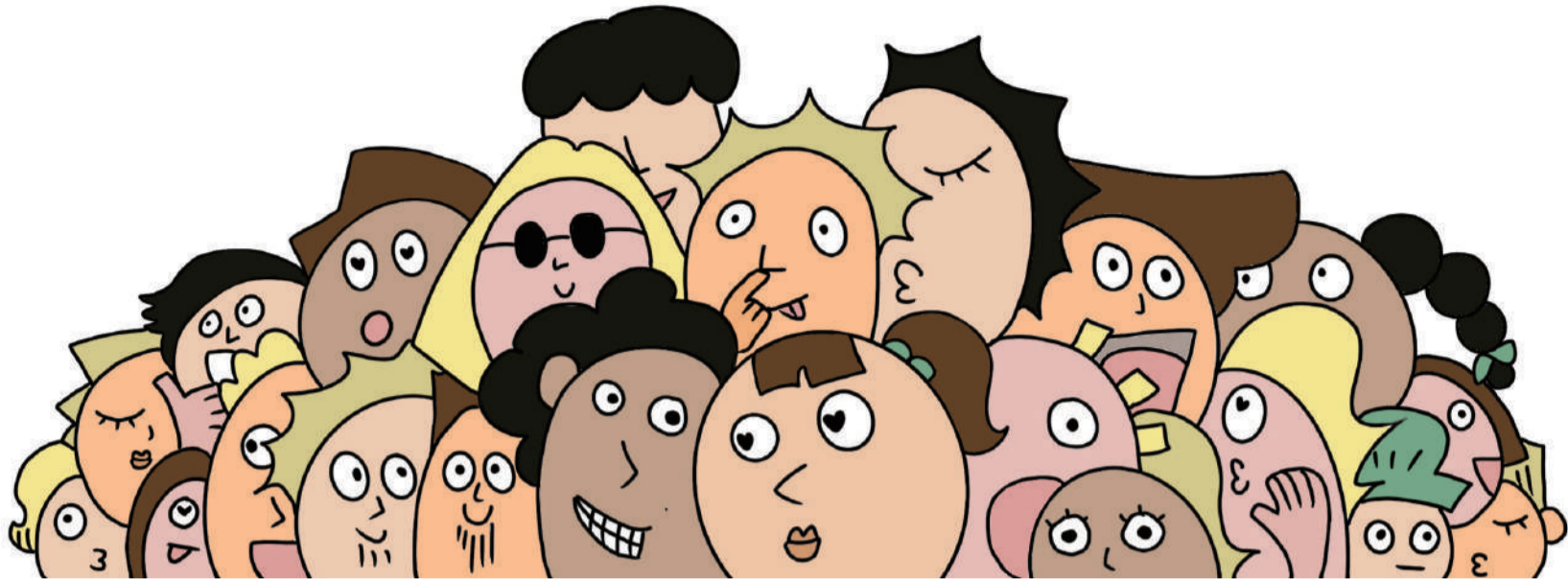
기자사령

퇴
정기자 권수연(인문 2)
수습기자 이예지(사회과학 1)

동정란

신재홍(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3월 5일 '다문화 교육의 대안: 상호문화교육' 도서를 출판했다.

생활동반자법, 한 지붕 아래 살면 '가족'이다



‘가족(家族)’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를 중심으로 해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민법』 제779조 제1항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비혼 동거 커플, 나아가 동성애자 커플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

이들처럼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아닌 경우에도 가족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 있다. 이른바 ‘생활동반자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이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는 현재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을 생활동반자관계로 묶는다. 즉 생활동반자들도 현행법상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가족 관계에서만 주어지던 지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의 형태가 혼인과 혈연관계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등장했다. 혼인이 당연시되지 않는 사회에서 같이 산다면 가족일 수 있다는 인식이 태동했기 때문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68.5%의 응답자가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은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이나 혈연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면 1인 가구 수를 감소시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라 다양한 가구 형태가 여러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일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나 주택 청약 등에서 제한이 생긴다. 배우자의 직장에서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하고 주택 청약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을 받기 어렵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수술 등의 응급의료 동의는 법정 대리인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과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의 파스(Pacte Civil de Solidarite) 제도가 대표적이다. 1999년 도입된 파스 제도는 성별 상관없이 성인인 두 사람이 동거 신청만 해도 혼인신고를 한 이들과 동일한 지원을 제공한다. 동거를 신청한다는 의미의 파스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

면 ▲건강보험 ▲부동산 ▲상속 ▲세금 등에서 법적 혼인 관계와 동일한 지원을 보장받는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지만, 국내 법 제정은 정체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진선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나 종교계 등의 반대의견이 심해 발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용혜인(당시 기본소득당) 의원이 처음으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반발이 존재해 제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학중(가정경영연구소) 소장은 “종교계 등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의견이 강해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는 만큼 현대 사회에 만연한 동거인도 가족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김서현(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탄생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여러 갈래의 가치관과 공존한다는 차원에서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현재 허용되지 않은 동성혼의 경우도 법 제정을 통해 혼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자도 가족을 형성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 교수는 “동성애자도 결혼해 가족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며 “평등하게 살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생활동반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활동반자 관계가 가족으로 인정되다 보니 지원을 받기 위해 위장 결합을 할 수 있다는 빈틈도 존재한다. 생활동반자법이 혼인과 비교했을 때 법적 구속력이 느슨하기에 혜택을 노리고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소장은 “위장 결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생활동반자를 위해 준비한 예산이 잘못 쓰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동성애 커플도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 동성간 결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팽배해 이런 여론을 점진적으로 설득시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소장은 “동성 결합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생활동반자들의 자녀가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는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해 자녀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조 교수는 “독신이 아닌 생활동반자와 함께 자녀를 키운다면 두 사람이 함께 교감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장 결합 또한 법령 악용에 대비한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강 소장은 “위장 결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 사항을 철저히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응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타인과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정유진(전북대학교 아동학) 교수는 “생활동반자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 여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첨언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는 생활동반자의 ▲정의 ▲성립 ▲해소 ▲효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생활동반자관계’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두 성년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단, 혼인 중이거나 이미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등 반려자가 있는 사람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이러한 생활동반자관계는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하거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당사자 간의 혼인이 성립했을 경우 등에 관계 해소가 가능하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가족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기존의 가족이 혼인, 혈연에 한정된 것과는 다르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친구 사이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의 수가 늘어나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다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의료 조치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응급의료 동의는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동거인이 갑작스럽게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해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지만,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응급의료 동의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강 소장은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됨으로써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대한민국헌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 요건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생활동반자법이 비혼 동거와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강 소장은 “보수적인 사회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생활동반자법을 악용한다고 여겨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동반자 간의 자녀가 불안정한 양육 환경 속에서 자랄 위험도 존재한다. 혼외 출산 후 부모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체된다면 자녀

